

개인정보보호 정책추진 현황 및 향후방향

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 한순기

1. 주요 정책추진 현황

- 2011년 공공·민간분야를 망라한 일반법인 ‘개인정보보호법’ 제정
 - 그간, 법 적용을 받지 않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제시
 - ※ 일반법인 ‘개인정보보호법’을 기준으로 적용분야 및 대상에 따라 ‘정보통신망법’, ‘신용정보법’, ‘의료법’ 등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관부처·적용법규를 명확히 함
-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 및 실태 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, 기술지원 등 추진
 - 우선 범정부적으로 주민번호 수집·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(‘12.4월)하고, 방통위·금융위·복지부 등과 협력하여 주요 분야·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배포
 -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, 전문교육, 기관별 교육 등 집중적인 교육·홍보
 - 사업자단체, 소비자단체, 공공기관 등 40개 기관이 참여한 범국민 운동본부를 출범(‘12.3.29)하여 「대학생 개인정보보호지원단」(‘12.7월),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캠페인(‘12.9월) 등 실시
 -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를 위해 ‘지역현장방문지원단’, ‘기술지원센터’ 등을 운영하여 조치사항 안내, 무료백신 설치, 전문컨설팅 등을 지원
- 개인정보보호관련 각종 법령 정비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, 취약 분야·업종 조사·점검 등을 통해 실태 개선 노력
 - 행정·민원 서식 개선, 법령 해석 및 개인정보 침해 상담 및 컨설팅
 - 공공·금융·의료·유통물류 등 주요분야에 대한 실태점검·행정 처분, 범정부 합동점검단을 통한 합동조사, 예방관제, 기술지원
 - ※ ‘12년 상담·지원 166,801건, 처분 750여건, 10만개 홈페이지 모니터링·조치

2. 환경 및 이슈

- 빅데이터, 클라우드 컴퓨팅 등 데이터 개방·공유기반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필요
 - * 스마트폰 사용자 약 3천만명,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증가('12년 400억달러→'16년 1,000억달러), 빅데이터 시대 도래('11년 1.8제타바이트→ '20년 35제타바이트)
- FTA 체결 증가, 다국적 기업 영업확대 등 글로벌 경제교류가 확대되어 개인정보 해외이전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피해발생 우려

3. 향후 정책방향

- **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 노력 경주**
 -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주요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분야별 법령 일괄정비와 함께 통신·금융 등 주요 민간 업종 계약서·수집서식 개선 추진
 - 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소상공인,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현장맞춤형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범국민운동본부, 협단체 등 자율단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문화·저변 확산
 - 개인정보 열람 청구, 침해상담·분쟁조정 등 정보주체의 권익향상과 개인정보 유출·오남용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·대응기능 강화
- **신규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추진**
 - 다양한 IT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방안을 연구하고, 빅데이터,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이슈에 부합하는 원칙·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립
 - *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 조화방안 논의시작할 시점
 - EU, APEC 등 국제규범에 맞는 국외이전 가이드 마련, 주요국가와의 공조 및 국제협력도 강화

□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경과

- 17대 국회, 3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 의원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
 - ※ 노회찬 의원(민노당, '04.11) 이은영 의원(우리당, '05.7), 이해훈 의원(한나라당, '05.12)
- 18대 국회, 정부안과 의원안이 각각 발의되어 3년간 6차례 심사 끝에 통과
 - ※ 정부안 발의('08.11), 이해훈의원안 발의('08.8), 변재일의원안 발의('08.10)

<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심사 경과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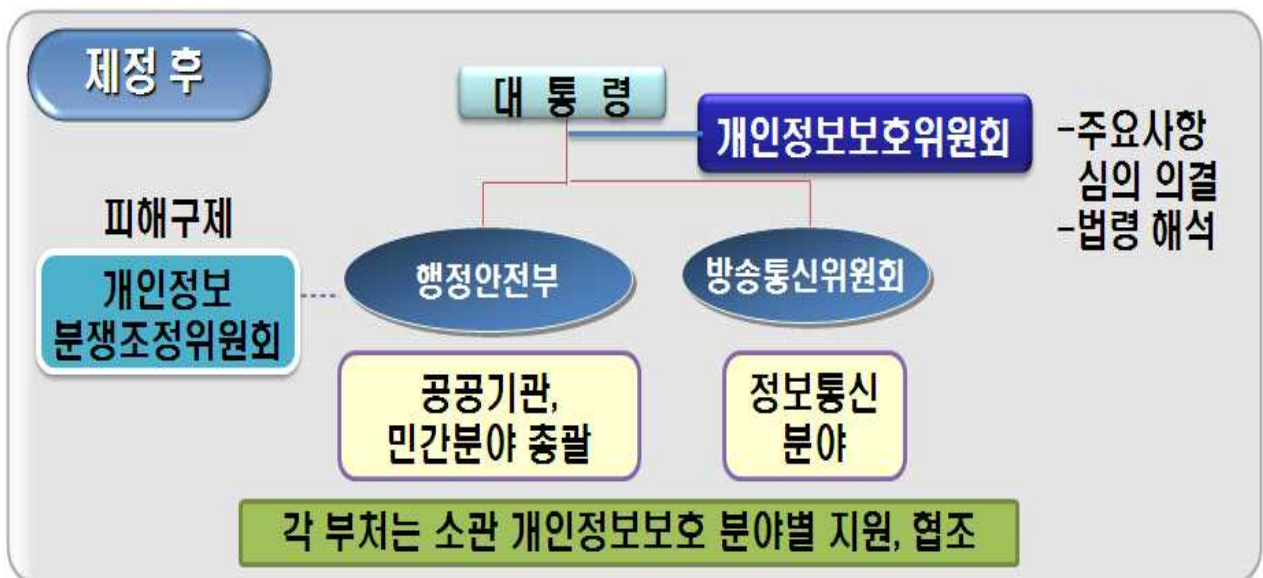
- ▶ 행안위 : 1차소위('09.2), 2차·3차 소위('10.4), 4차·5차소위('10.9)
- ▶ 법사위 : 법안2소위 회부('10.12.7), 법사위 의결('11.3.10)
- ▶ 국회 본회의 의결('11.3.11), 공포('11.3.29)

-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공포, 9월 30일 시행

□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체계

- 국회, 학계, 시민단체, 정부가 오랜 논의 끝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여건 및 현실, 국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정
-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또한 법체계,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, 기관간 역할 분담을 고려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설계

<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체계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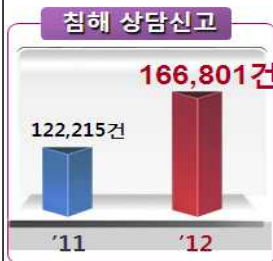


인식확산 및 개선(12년 말 기준)

추진실적

- | | |
|--|---|
| <p>1. 교육이수 : 총 895,417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공공) 826,731명(전체 공무원의 91.9%) - (민간) 6,353명 - (사이버) 62,333명 | <p>2. 간담회 및 컨퍼런스 개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간담회 : 61개 단체, 7회 - 컨퍼런스 : 3회 |
| <p>3. 현장 컨설팅 및 사례집 발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7개 업종, 267개 사업자 | |

주요성과



취약분야 지원 및 보호조치 강화(12년 말 기준)

추진실적

- | | |
|---|--|
| <p>1. 기술지원센터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C백신 무상보급 : 4,488개 - 보안솔루션도입비용 지원 : 617개 - 기술상담 및 컨설팅 : 425건 - 취약점 점검 : 518건 | <p>2. 소상공인 현장방문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29개 시군구 1만3천개 사업자 |
|---|--|

주요성과



※ CCTV 설치대수 368만5천대